

“도심 침수 막으려면 녹지 늘리고 소하천 되살려야”

단기 땀길로는 상습 홍수 피해 예방 ‘역부족’
저류지 확대·복개하천 복원 등 중장기책 시급
국회 긴급토론회서 전문가들 이구동성 주장

지난달과 이달 초 연달아 홍수 피해를 입은 광주 도심의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과 노후 교량과 하수도 교체는 물론 친환경습지 등 녹지 확대, 생태 저류지 조성, 복개하천 복원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윤회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서 ‘도시 기반의 기후 회복 탄력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앞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기반시설에 스마트센터 설치 및 이상 징후 조기경보 체계 도입을 비롯해 △노후 교량·하수도 정밀 진단과 선제적 보수 예산 확충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시 전반에 걸쳐 시행 △침수·폭염 대응 도시 설계 확대(도시숲, 방재형 공원 등) △서방전, 융복합, 소태전 등 복개해 폐천이 된 저류 소하천 전면 복원이다.

윤회철 센터장은 “기후위기 시대 광주 시민과 도시와 함께 살아남는 해법은 ‘도

시 전체의 변화’에 있다”며 “이번이 광주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호 (주)스툼바이오 대표는 ‘광주시 침수 대응을 위한 스핀지 도시와 이동형 빗물 저류·배수로’라는 발제에서 도심 침수피해에 대한 중장기 대응 방안으로 독일 함부르크, 베를린처럼 공원·녹지에 저류 기능을 부여한 ‘물순환 스핀지 도시 조성’과 서창천, 소태전 등을 비롯한 복개하천의 복원을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 침수 대책으로는 상습 침수 구역인 백운광장 등에 10만㎡ 규모의 이동형 빗물 저류·배수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주변 도로와 학교 운동장에 이동형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이송 펌프와 긴급배수관을 연결해 초단기 강수예보에 따라 운용된다.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과 교수는 ‘기후재난 적응도시 광주를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이라는 발제를 통해 광주 도심에 친환경습지공원, 가로와 광장 녹지화 등 공공녹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민 1인당 공공녹지가 6.2㎡에 불과해 적정 수준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것은 물론 서울(8.48㎡), 대전(8.05㎡)보다 열악해 기후재난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의 구축, 자연기반해법(도시숲, 생태하천복원 등), 기후 데이터&ICT, 사회대응시스템 등을 강화해 현재의 저밀도 도시를 인프라와 상업시설을 갖춘 중밀도 도시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회서 김민한 호남대 교

수는 “기후재난이 발생한 뒤 관련 정책의 실현 속도에 비해 지역민의 망각 속도가 더 빠른 것이 현실”이라며 “2005년에도 도심 홍수가 발생하고 대책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재난 지역에서 또 다시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실개천을 복원에 나감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시행할 때 관련 부지를 확보하도록 조례로 강제해야 한다”며 “아울러 각종 시설의 자연기반 조정면적을 확보할 때도 물 순환을 위해 그 부

지의 가장 낮은 지역을 우선 확보할 것을 조례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양해근 한국환경경제연구원 소장은 “2001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을 마련할 당시 물순환에 기반한 도시운영 전략을 마련했는데 실천된 것이 거의 없다”며 “당시 생태저류지 조성, 복개하천 복원, 도심공동화지역 스포닉화 전략 등을 다시 꺼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또 “광주는 지질학적으로 고

대 무등산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물이 취약한 안산암, 화강암 지대가 대부분이어서 하천이 크게 발전하지 못해 고밀도 도시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소하천을 살리지 않고서 저류지 신설로는 치수가 어려우니 도심을 중·저 밀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기후 재난을 극복을 위한 광주의 세 가지 과제를 내놓았다. 광주의 자연 생태계와 치수에 대한 기후환경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도심에 소규모 습지 등 비모용 거둔을 1만 개 가량 조성하며, 복개하천 15곳 가운데 1곳을 복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제안이다.

김영현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는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 올해 말 1차 시행되는 ‘물순환촉진사업’에 광주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70% 이상 반영돼 폭염, 홍수, 가뭄에 대비한 도시업을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번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정경태 대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만큼 안팎의 관심이 지대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시민이 한 팀이 돼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광주, 더 실기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배제” 전진숙 의원, 정부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은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인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다. 그 결과, 미혼부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정재형 회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고향사랑 기부

향우회원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1000만원 기탁

전남도는 고향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출향민의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기부 릴레이 참여가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회장 정재형)가 18일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전남도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향우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것으로, 기탁식에는 정재형 총연합회장, 고갑재 이천시호남향우회장, 전승희 여성회장, 배행순 여성회수석부회장, 김경수 사무총장 등 주요 향우들이 참석했다.

정재형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남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어 뜻 깊다”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린 시절 저를 지켜준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보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향우회원과 함께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경기속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만 곳에서도 항상

마음 한 권 고향에 대한 인연을 간직하고, 응원해주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호남향우회엔 경기도 31개 지역별 향우회를 중심으로 약 45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교류와 고향 방문을 이어가며 지역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현장 목소리 기반 농정 대전환 이끌 터”

김호 농업·농어특별위원장 취임식 개최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특위 대회의실에서 김호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부 사무국 전 직원은 물론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실과 유관 부처 실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출발과 완성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농업·농어특별위원회가 현장,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협력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과 직접 대화·소통·협력해 정책 대전환과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위원장은 “농업·농어촌·농어민은 식량 주권·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기반이다”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농어업위기·식량위기,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인력 부족, 글로벌 통상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학자로서의 전문



성과 현장과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호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지속가능한 3농을 실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이루며, 농업이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유관 부처에 성원과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조국 “내년 6월 국민심판 받겠다”

선거 출마 의사 밝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 국민의힘 의석 수·세력 수를 반 이상 줄여야 한다”며 “마음 같아선 ‘0’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방송인 김정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 광주·전남 권리당원 모집…30만명 몰려

내년 지방선거 과열 조짐…당원 확대 부작용 우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신규 모집에 30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엔 접수된 신규 권리당원 중 기존의 중복 가입자나 서류 허위 기재자 등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권리당원 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권리당원 신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5만장의 가입 서류가 제출됐다. 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15만장이 접수됐다.

지난 당 대표 보궐선거 기준 호남(광주·전남·전북)의 권리당원은 36만5000명으로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계선에 현재 호남 전체의 권리당원 숫자와 맞먹는 신규 가입이 접수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엔 접수된 30만명 가운데

기존 당원의 중복 가입이나 서류 허위 기재 등은 부적격자로 배제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당원 수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대거 조직표를 확보하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면서 신규 당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광주·전남 권리당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를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